

---

## 소비세 개혁,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

2014년 08월 07일, 차이신망(CAIXIN.NET)

[차이신망(CAIXIN.NET)] (싱원(邢昀) 견습기자) 예산법 개정이 8월 말에 끝날 예정이어서 새로운 재정과 세무개혁의 선결 과제인 예산관리 개혁이 실천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다음 과제인 세무제도 개혁도 바로 가동될 전망이다.

소비세 개혁을 통해 징수범위와 세율구조를 조정함과 동시에 '직권과 지출책임이 서로 맞물리는 제도 구축'의 과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소비세 징수단계와 수입귀속 조정도 병행될 전망이다. 소비세 개혁은 영업세-증치세 통합 이후 현행 세금 종목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혁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6월 30일 심의 통과한 <재정 및 세무제도 개혁 심화의 총괄방안>에서는 예산관리제도 개선, 세수제도 보완,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조정을 개혁의 중점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아울러 중앙에서는 2016년까지 재정과 세무제도 개혁의 중점 업무와 과제를 완성하고 2020년까지 현대 재정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 세제 개혁의 요점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재정 및 세무제도 개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올해 안으로 예산관리 개혁을 완성하고, 내년에는 세제개혁 추진에 주력하며, 2016년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조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세 개혁은 '세수제도 보완'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조정' 두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자가 재정부서를 통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소비세 개혁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번째 내용은 소비세 징수범위 및 세율 조정이다. 에너지 소모율과 환경오염성이 높은 일부 고급소비품을 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세율구조 조정과 동시에 일부 대중 일상용품을 소비세 징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두번째 내용은 소비세 징수단계 조정이다.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소비세 징수단계를 생산(수입) 단계에서 도소매 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다.

---

세번째 내용은 소비세 수입 귀속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여 현 단계의 중앙세에서 지방세 또는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조세 종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형세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일반화장품, 알콜 및 소매기량 오토바이 등 상품의 소비세를 취소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소비세잠행조례에 따르면 '화장품' 세목하의 향수, 립스틱, 매니큐어 등 미용, 메이크업 화장품과 고급 피부관리 화장품, 화장품 세트에 대해 30%의 소비세를 징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속에서 위의 상품들은 모두 대중 일상용품으로 고세율의 소비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장품' 세목의 소비세 세율은 30%로 폭죽·화포의 세율 15%와 요트, 골프공, 골프용품의 세율 10%에 비해 훨씬 높다. 세율구조가 확실히 불합리하다.

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추진하였고 '화장품' 세목을 고급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 지방세로 전환

징수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생산단계 징수에서 소비단계 징수로의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왕보우안(王保安) 재정부 부(副)부장이 발표한 문장에서는 재정부서가 대부분 상품의 소비세 징수단계를 현재의 생산(수입) 단계에서 도소매 단계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세의 특성에 근거할 때 징수단계가 소비자와 가까울수록 소비 조절·유도 기능을 더욱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소비세 징수를 시작한 초기에는 징수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금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징수 원가가 저렴한 생산단계에서 징수하기로 결정했었다.

현단계 소비세를 징수하는 상품 중 금은(金銀) 액세서리만 소비자가 소매단계에서 소비세를 납부하고, 권련의 경우 생산단계 및 도매단계에서 이중적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타 세목들은 생산, 위탁가공 및 수입단계에서 징수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영업세-증치세 통합 이후 지방세 주요 종목이었던 영업세가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증치세로 대체되었는 바 이러한 과도기적인 방법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

지방정부의 영업세 수입 축소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징수단계를 소비단계로 조정하고 소비세를 중앙수입에서 지방수입으로, 중앙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다.

2013년 전국 영업세 수입은 1.72만 억이었다. '영업세-증치세 통합' 이후 지방을 위해 만 억 규모의 새로운 세금 종목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쉬산다(許善達) 전임 국가능원국 국장의 추산에 따르면 소비세와 차량구입세 수입의 합계금액이 '영업세-증치세 통합'으로 인해 축소된 지방정부 수입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다고 한다.

2013년 소비세 수입은 8,231억 위안이고 차량구입세 수입은 2,596억 위안으로 합계금액은 1만 억을 넘는다.

일부 학자들은 소비세와 차량구입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자원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세, 환경보호세 징수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소비세는 1994년 세제개혁 추진에 따라 징수가 시작되었는 바 화물에 대해 증치세를 징수하고 나서 특정의 재정 또는 조절 목적에 근거하여 환경오염형 상품, 사치품, 소비를 권장하지 않는 상품을 선별하여 소비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당시 담배, 술, 소형자동차 등 11류의 상품들이 선별되었다.

지난 10년간 재정부서는 소비세의 징수범위와 징수정책에 대한 조정을 지속해 왔다. 2006년 세목과 세율에 대한 구조성 조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으로 징수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골프공과 골프용품, 고급 손목시계, 요트, 목제 일회용 젓가락, 원목마루 등 세목들이 새로 추가되었다.